

## 제주 백신 우선 접종 가능할까

원 지사-김두관 의원 논의 속 도의회는 접종 건의  
 “현재 의료 과부하... 관광객 폭증 감염 우려 높아”  
 “형평성 문제” 현실론 vs “섬 관광지 특수성 감안”

올여름 관광객이 제주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접종 순위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백신 배정, 대상 선정까지 백신에 관한 모든 조치가 전적으로 국가 통제 아래 이뤄지기에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지역 형평성 논리도 껴야 한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도민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제주 전역에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섬 특성상 확진자가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환자 이송과 의료인력 수급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방역당국은 도민 우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이룬 시기에 형성하면 도민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도 도민 백신 우선 접종 논의에 불을 당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원희룡 지사와 만나 “집단면역이 가능한 제주도민의 70%, 약 40만명에 대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하는 내용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우선

접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원 지사는 “적극 동의한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7일 논평을 내 김 의원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코로나19 국민 심리 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

안’을 가결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관건은 정부의 수용 여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불량 배분과 접종계획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통제하에 각 지자체로 연결되는 시스템인 데다, 각계 분야에서 여러 이유로 우선 접종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주도민 대상 우선 접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제주도 뿐 아니라 학원강사, 택배기사,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면 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도민 우선 접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도내 의료계 감염병 전문가는 “특정 지자체에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은 결국 중앙 방역당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관광 수요가 많아 코로나 확산세가 우려되는 지자체 뿐 아니라 대면 접촉이 많은 집단에서 우선 접종을 요청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대해 연장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상가 건물에 둥지 트 직박구리 7일 제주시 연동 한 건물 전동 구조물에 둥지를 트 직박구리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상국기자

##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도민 생각은

25일까지 500명 인식조사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듣는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때 보상 개

념으로 이미 훼손된 다른 토지를 복원해 환경자원의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민, 관광객 등 500명을 대상으로 ‘환경자원총량제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인식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보전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보전지역 총량(%)과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필 계획이다.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행정시 홈페이지(http://jeju.go.kr) 모바일 설문지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앞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해 목표 총량 수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표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제주권 대토론회**

올해는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난해 전부개정안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법제가 주민의 공감과 지지 아래 한층 내실 있고 선진화된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는 전국순회대토론회를 기획, 그 네번째로 제주권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코로나 시기를 감안, 초청인사 중심으로 갖게 되며, 각 지역 회원사 지면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보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

- 주 제 :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 일 시 : 2021년 6월10일(목) 14:00 - 16:30
- 장 소 : 제주 시리우스호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33) 시리우스홀(지하 1층)
- 대토론회 프로그램
- 기조발제 I :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
- 발 제 II :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 좌 장 :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지정토론 :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박춘석 제민일보 논설위원실장, 강호진 제주대인연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행사 문의처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무국 (033)260-9009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리일보

## 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박차’

마케팅·예산·교육 분야 적극 지원... 전문 컨설팅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예산·교육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센터와 공동으로 ▷제품 온라인 체험단(Good Goods) 운영 ▷택배비·홍보비·품질검사비·방역비 지원 ▷미창업자·초기 창업자 스타트업 스쿨 및 사업제 역량강화 교육 ▷경영 애로사항 1:1 맞춤형 컨설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 온라인 체험단 사업은 미래 잠재 고객인 체험단을 모집해 직접 제품을 맛보거나 사용한 후기를 SNS나 블로그에 올리는 6차 제품 마케팅의 일환이다.

특히 6차산업 인증을 받은 6가지의 좋은 제품 ‘Good Goods’(굿 굿

즈)라는 컨셉으로 좋은 제품과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6차산업에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택배비·홍보비·품질검사비·방역비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참여 신청은 6월 중순까지 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미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6월 중 4회에 걸쳐 현장코칭 전문위원과 경영체 간 1:1 맞춤형 전문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 온라인 스타트업 스쿨,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150**  
 7일 18시 기준

2021 제주산림문화 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성공 개최를 축하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승고한 호국비행  
 기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